

01 행정가치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의 총합이라고 파악하며,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ㄴ. 롤스(Rawls)의 사회정의의 원리에 의하면 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이며, 제2원리는 차등조정 원리이다. 제2원리 내에서 충돌이 생길 때에는 ‘차등원리’가 ‘기회균등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
- ㄷ. 과정설은 공익을 사익을 초월한 실체적, 규범적, 도덕적 개념으로 파악하며, 공익과 사익과의 갈등이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 ㄹ. 베를린(Berlin)은 자유의 의미를 두 가지로 구분하면서, 간섭과 제약이 없는 상태를 적극적 자유라고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소극적 자유라고 하였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해설 ㄱ, ㄴ [X] 실체설이 아닌 과정설에 대한 설명이다.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을 초월한 실체적·규범적·도덕적 개념으로 파악한 것이다. 실체설에 따르면 공익과 사익의 갈등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 [×] 롤스의 사회정의의 원리에 의하면 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동등)원리이며, 제2원리는 차등조정 원리이다. 차등조정의 원리는 기회균등의 원리와 차등의 원리가 있으며, 양자가 충돌할 경우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

ㄹ [×] 베를린은 소극적 자유란 정부나 권력으로부터의 간섭과 제약이 없는 상태이며, 적극적 자유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한다.

참고 ▶ compass 행정학 총론 p.98~103

▶ ①

02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인 여유자금 10억원을 금융자산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투자대안으로
는 예금, 채권, 주식이 있다. 각 금융상품은 미래 경기상황(경기호황, 경기보통, 경기침체)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상이한 기대수익을 발생시킨다. 만약 경기상황을 예측하기 힘들다면 의사결정자의
성향에 따라 투자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의사결정자가 기대수익이 높은 자산에 투자한다고 할
때, 예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위 : 억원)

투자대안 경기상황	호황	보통	침체
예금	2	2	2
채권	3	2.5	1
주식	6	3	-2

예) 경기호황 시 예금의 기회손실은 4억원($6 - 2 = 4$)이다.

- ① 의사결정자가 향후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각 대안중에서 예금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 ② 의사결정자가 향후 경기가 호황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각 대안중에서 주식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 ③ 의사결정자가 각 대안들의 최대기회손실이 최소인 대안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각 대안 중에서 채권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 ④ 각각의 경기 상황 발생확률이 1/3이라고 한다면, 각 대안 중에서 주식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 ⑤ 의사결정자의 경기호황에 대한 기대성향이 0.3이고 경기보통에 대한 기대성향이 0.5, 경기침체에 대한 기대성향이 0.2라면, 각 대안 중에서 예금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 해설**
- ① [○] 향후 경기침체가 예상된다면, 예금의 경우 기대수익이 2, 채권은 1, 주식은 -2 이므로 예금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 ② [○] 향후 경기가 호황이 예상된다면, 예금의 경우 기대수익이 2, 채권은 3, 주식은 6이므로 주식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 ③ [○] 예금의 경우 최대기회손실은 4, 채권은 3, 주식은 4이므로 최대기회손실이 가장 최소인 채권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경기호황 시 각 기회손실	경기보통 시 각 기회손실	경기불황 시 각 기회손실
예금의 기회손실 : $6 - 2 = 4$	예금의 기회손실 : $3 - 2 = 1$	예금의 기회손실 : $2 - 2 = 4$
채권의 기회손실 : $6 - 3 = 3$	채권의 기회손실 : $3 - 2.5 = 0.5$	채권의 기회손실 : $1 - 1 = 3$
주식의 기회손실 : $6 - 6 = 0$	주식의 기회손실 : $3 - 3 = 0$	주식의 기회손실 : $2 - (-2) = 4$

<기회손실>

투자대안 경기상황	호황	보통	침체	최대기회손실
예금	4	1	4	4
채권	3	0.5	3	3
주식	0	0	4	4

- ④ [○] 라플라스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각각의 경기 상황 발생확률이 1/3이라고 하면,
 - 예금 : $1/3 \times 2 + 1/3 \times 2 + 1/3 \times 2 = 2$
 - 채권 : $1/3 \times 3 + 1/3 \times 2.5 + 1/3 \times 1 = 6.5 / 3 \approx 2.16$
 - 주식 : $1/3 \times 6 + 1/3 \times 3 + 1/3 \times (-2) = 7 / 3 \approx 2.33$ 이므로 주식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 ⑤ [×] 상황별 가중치(확률)에 따라 경기호황 : 0.3 / 경기보통 : 0.5 / 경기불황 : 0.2 라고 할 때 기댓값을 계산해보면,
 - 예금 : $0.3 \times 2 + 0.5 \times 2 + 0.2 \times 2 = 2$
 - 채권 : $0.3 \times 3 + 0.5 \times 2.5 + 0.2 \times 1 = 2.35$
 - **주식 : $0.3 \times 6 + 0.5 \times 3 + 0.2 \times (-2) = 2.9$ 이므로** 예금이 아닌 주식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정책 p.243, 244

▶ ⑤

03 다음 중 정책의제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의제설정은 다양한 사회문제 중 특정한 문제가 정부의 정책에 의해 해결되기 위해 하나의 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이다.
- ② 정책의제는 어떤 사회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정부의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단계에 이른 문제를 의미한다.
- ③ 공중의제는 일반공중이 실제로 정책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표명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말한다.
- ④ 정책의제설정은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 등의 유형이 있다.
- ⑤ 정책의제설정 과정에는 주도집단, 정책체제, 환경 등의 변수들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해설 ② [×] 정책의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한 문제로서 ‘정책적 해결의 필요성을 가진 사회문제’를 의미한다. 일반대중의 관심과 주의를 받을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정부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문제는 공중의제 또는 체제의제이다. ③ [○] 공중의제(체제의제)는 일반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정부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문제를 말한다. 체제의제는 문제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 내의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어야 하며, 어떤 방식이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정책 p.209~213

▶ ②

04 다음 중 강화일정(schedules of reinforcemen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속적 강화는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강화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 ② 고정간격 강화는 부하의 행동이 발생하는 빈도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강화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 ③ 변동간격 강화는 일정한 간격을 두지 않고 변동적인 간격으로 강화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 ④ 고정비율 강화는 성과급제와 같이 행동의 일정 비율에 의해 강화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 ⑤ 변동비율 강화는 불규칙한 횟수의 행동이 나타났을 때 강화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해설 ① [○] 연속적 강화는 성과(행동)가 나올 때마다 강화시키는 방법이다. ② [×] 고정간격 강화는 규칙적 시간간격으로 강화 요인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고정간격 강화는 부하의 행동이 발생하는 빈도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결정되어진 일정한 간격으로 강화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생하는 빈도에 따라 제공하는 것은 고정비율 강화이다. ③ [○] 변동간격 강화는 불규칙적으로 변동적인 시간간격으로 강화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④ [○] 고정비율 강화는 행동의 일정한 빈도 또는 비율의 성과에 따라 강화를 제공하는 것이다. ⑤ [○] 변동비율 강화는 불규칙적 빈도 또는 비율의 성과에 따라 강화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유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조직론 p.384

▶ ②

05

- ④

06

- ④

07 다음 중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 : B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균형성과표는 재무적 관점과 비재무적 관점의 균형을 강조한다.
- ② 균형성과표를 정부부문에 적용시키는 경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재무적 관점보다 학습과 성장의 관점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③ 균형성과표를 조직에 적용시키는 경우 4대 관점뿐만 아니라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5대 관점이나 6대 관점으로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④ 균형성과표는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 간의 균형을 강조한다.
- ⑤ 균형성과표는 과정과 결과 중 어느 하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간의 인과성을 바탕으로 통합적 균형을 추구한다.

해설 ② [×] 균형성과표를 정부부문에 적용함에 있어 공공부문에서는 재무적 관점보다 고객의 관점이 중요하다.

* 균형성과관리의 4대 관점

재무적 관점	개념 : 기업의 주인인 주주에게 보여주어야 할 성과의 관점. 기업BSC에 있어 최종목표 공공부문 : 공공부문은 사명달성이 궁극적 목표이므로 재무적 관점은 제약 조건으로 작용
고객관점	개념 : 서비스의 구매자인 고객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 성과의 관점. 공공부문 : 공공부문에서는 재무적 관점보다 고객의 관점이 중요 . 그러나 이해관계자가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않은 한계有.
내부프로세스 관점 (내부업무과정적 관점)	개념 : 목표달성을 위해 기업내부의 일처리 방식의 혁신관점. 공공부문 : 정책결정과정, 정책집행과정, 재화와 서비스의 전달과정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
학습과 성장 관점	개념 : 변화와 개선의 능력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 것인가의 관점. 미래업무운영에 대한 근거를 제공. '미래의 관점'으로 대체 설명되기도 함. 공공부문 : 구성원의 지식의 창조와 관리, 지속적인 자기혁신과 성장 등이 중요한 요소

- ① '재무적관점'과 '고객관점'은 가치지향적 관점으로 상부구조에 해당하고,
- ② '업무처리관점'과 '학습 및 성장의 관점'은 행동지향적 관점으로 하부구조에 해당
- BSC는 각각의 관점간의 균형점을 모색 : 재무적 관점과 비재무적 관점의 균형, 과정과 결과의 균형, 과거 · 현재 · 미래의 균형을 추구하며, 4대관점의 성과지표를 전략과 시스템적으로 연계시킨.

참고 compass 행정학 조직론 p.414, 415

▶ ②

08

- ②

09

- 6 / compass 행정학

해설 ▶ 미션, 비전, 전략은 정책과 함께 결정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미션·비전·전략은 조직을 분석의 단위로 한다.

① [○] 미션은 ‘왜 우리 조직이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 조직이 없으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답을 담고 있다. 조직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다. 예컨대 월드컵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던 것이며, 행사가 끝나 그 미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에 그 조직이 해체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② [○] 비전은 어떤 단위(국가, 부처, 자치단체 등)의 미래의 모습에 대한 머릿속의 그림이자 언어로 그린 그림이다. 조직 단위에서 미션이 조직의 존재 이유, 즉, 조직이 왜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답이라면, 비전은 조직의 미래상이 무엇인지를 말해 준다.

③ [○] 핵심가치(core value)는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의 기준을 말한다. 핵심가치는 조직 안에서의 의사결정과 업무수행의 전과정에 중요한 규범요소로 작용한다.

④ [×] 비전은 행정에 방향성과 목표성을 제공한다. 다만 그 비전이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여 만든 공유의 비전(shared vision)이어야 한다. 즉, 일방향 명령형 비전이 아니라 쌍방향 합의형 비전이 필요하다.

⑤ [○] 미래의 모습을 정제된 언어로 문장화하면 팀에서 만든 비전선언문이 된다. 즉, 비전선언문은 조직의 미래모습을 구체화한 것으로 무엇을 할 일이고 무엇을 할 일이 아닌지에 대한 지침 내지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

▶ ④

10 정치와 행정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전통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정치는 가치개입적 행위이며 행정은 가치중립적 행위이다.
- ㄴ. 정치는 효율성을 확보하는 과정인데 반해 행정은 민주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 ㄷ. 정치행정 일원론에서의 행정의 정치적 기능이란 정책형성기능을 의미한다.
- ㄹ. 1960년대 발전행정론이 대두하면서 기존의 행정우위론과 대비되는 정치우위론의 입장에서 새 일원론이 제기되었다.
- ㅁ. 사이먼(Simon) 등 행태주의 학자들은 행정의 정책결정 기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원론과 구분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해설 ▶ ㄱ, ㄷ [○]

ㄴ [×] 정치는 민주성을 확보하는 과정인데 반해 행정은 효율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ㄹ [×] 1960년대 발전행정론의 대두되면서 기존의 정치우위론과 대비되는 행정우위론의 입장에서 새일원론이 제기되었다.

ㅁ [○] 사이먼의 행태행태론은 행정의 정책결정기능(정치적 기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치행정이원론과는 구별된다.

참고 ▶ compass 행정학 총론 p.29~36

▶ ③

11 다음 중 예산집행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긴급배정은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당초의 연간정기 배정계획보다 지출원인 행위를 앞당길 필요가 있을 때 해당사업에 대한 예산을 분기별 정기 배정계획에 관계없이 앞당겨 배정하는 제도이다.
- ② 예산의 이체는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등으로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관련되는 예산의 귀속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 ③ 예산의 전용은 예산구조상 장·관·항 간에 상호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 ④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가로 하여금 다음 연도 이후에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 ⑤ 예비비는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한다.

해설 ① [X] 긴급배정이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해당분기 도래 전에 앞당겨서 배정할 수 있는 제도는 당겨배정이다.

② [○] 예산의 이체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직무와 권한의 변동 시 예산도 이에 따라 책임소관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 [×]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세항-목) 간의 상호융통을 말한다. 장·관·항 간의 입법과목 간의 상호융통은 예산의 이용이다.

④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금전 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그 채무 이행의 책임은 다른 연도 이후에 부담됨이 원칙이다. 특히 미리 예산으로 국회의결을 얻어야 하며, 채무부담의 권한만 부여한 것으로 지출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

⑤ [X]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재무행정론 p.643~648

► ②

12 다음 중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 ② 지방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주민투표의 투표일은 주민투표 발의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해야 효력을 가진다.

해설 ① [○]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② [×]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때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

③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주민투표법 제26조 제1항).

④ [○] 주민투표의 투표일은 주민투표발의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주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⑤ [○]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지방자치법 제26조 제1항 내지 8항).

참고 compass 행정학 지방자치론 p.794, 795, 799, 811

▶ ②

13 다음 중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마슬로우(Maslow)의 욕구계층론에 의하면 인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중 욕구, 자기실현 욕구의 5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하위계층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 계층의 욕구가 나타난다.
- ② 허즈버그(Herzberg)의 동기 - 위생이론에 따르면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해서 모두 동기부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욕구는 충족되어도 단순히 불만을 예방하는 효과밖에 없다. 이러한 불만 예방효과만 가져오는 요인을 위생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 ③ 애덤스(Adams)의 형평성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이 비교대상의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보다 크거나 작다고 지각하면 불형평성을 느끼게 되고, 이에 따른 심리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형평성 추구의 행동을 작동시키는 동기가 유발된다고 본다.
- ④ 엘더퍼(Alderfer)는 마슬로우(Maslow)의 욕구계층론을 받아들여 한 계층의 욕구가 만족되어야 다음 계층의 욕구를 중요시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데 더하여 한 계층의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바로 하위욕구의 중요성이 훨씬 커진다고 주장한다.
- ⑤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의하면 동기의 정도는 노력을 통해 얻게 될 중요한 산출물인 목표 달성, 보상, 만족에 대한 주관적 믿음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특히 성과와 보상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인 기대치의 정도가 동기부여의 주요한 요인이다.

해설 ①, ②, ③, ④ [○]

⑤ [×] 브룸의 기대이론에 따르면 기대치(기대감, expectation)란 자신의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달성한다는 기대를 의미한다. 성과와 보상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수단성(instrumentality)에 해당되는 설명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조직론 p.372~381

▶ ⑤

14

- ④

15

- ▶ ③

16 다음 중 전자정부 2.0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비스의 지능화를 통해서 개인별 맞춤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 ② 서비스를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 ③ 사람 중심으로 모든 사람의 참여와 공유를 강조한다.
- ④ 정보와 국민의 관계를 대등하거나 심지어는 국민중심으로 이동시키려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 ⑤ 누구나 가치 있는 정보나 새로운 서비스를 재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소유한 정보를 개방한다.

해설 전자정부 2.0은 정부 및 공공 부문에 Web 2.0 기술을 적용하여 구현되는 새로운 정부의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이다. Government 2.0 서비스를 유형화 시키면 서비스 목적에 따라 정부와 국민의 '양방향 의사소통 서비스', 공공정보 활용을 통한 '생활편의 제고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 ① [×] 서비스의 지능화를 통해서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자정부 3.0에 해당되는 설명이다.

구분	1995~2000년	2005~2010년	2015~2020년
	Government 1.0	Government 2.0	Government 3.0
	World Wide Web	Web 2.0	Real-World Web
접근성	정부중심	시민중심	개인중심
	- First Stop Shop - 단일 창구(포털)	- One Stop Shop - 정부서비스 중개 기관을 통해서도 접속	- My Gov't - 개인별 정부서비스 포털
서비스	일방향 정보제공 제한적 정보공개 서비스의 시공간 제약 공급 위주의 서비스 서비스 전자화	양방향 정보제공 정보공개 확대 모바일 서비스 정부·민간 융합서비스 신규서비스 가치 창출	개인별 맞춤정보 제공 실시간 정보 공개 중단 없는 서비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서비스의 지능화
채널	유선 인터넷	유·무선 인터넷	유·무선 인터넷 기기 통합(채널 통합)
업무 통합	단위 업무별 처리	프로세스 통합 (공공·민간 협업)	서비스 통합

▶ ①

17 다음 중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대해 최소한 2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⑤ 국무총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해설** ① [×]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 ②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동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 ③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동법 제10조 제1항).
- ④ [×]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 동법 제17조).
- ⑤ [×] 안전행정부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하(국무총리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정책론 p.296~298

▶ ③

18 다음 중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표관료제는 정부관료제가 그 사회의 인적 구성을 반영하도록 구성함으로써 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반영시키려는 의도에서 발달하였다.
- ② 크랜츠(Kranz)는 대표관료제의 개념을 비례대표로까지 확대하여 관료제 내의 출신 집단별 구성 비율이 총인구 구성 비율과 일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관료제 내의 모든 직무 분야와 계급의 구성 비율까지도 총인구 비율에 상응하게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③ 대표관료제의 장점은 사회의 인구 구성적 특징을 반영하는 소극적 측면의 확보를 통해서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적극적인 측면을 자동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다.

- ④ 대표관료제는 할당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해 현대 인사행정의 기본 원칙인 실적주의를 훼손하고 행정 능률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⑤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나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관료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볼 수 있다.

- 해설** ① [○] 대표관료제는 한 국가 내에서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구성비율에 따라 충원하는 원리가 적용되는 관료제이다. 대표관료제는 정부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시키려는 의도에서 발달된 개념이다.
- ② [○] 크렌츠는 대표관료제의 개념을 비례대표로까지 확대하여 관료제 내의 모든 직무와 계급 구성비까지 총인구비율에 상응하게 분포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 ③ [×] 소극적 대표성은 출신성분이 관료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을 말하며, 적극적 대표성은 태도가 행동을 결정하는 측면을 말한다. 대표관료제는 이러한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의 허구성'에 문제점이 제기된다.
- ④ [○] 대표관료제는 공직에의 임용 기준을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가 속한 집단에 두는 할당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실적주의를 훼손하고 행정능률을 저해시킬 수 있다.
- ⑤ [○]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장애인 의무고용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지역인재추천채용제 등은 대표관료제의 사례에 해당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인사행정론 p.477~479

▶ ③

19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경제적 생산활동의 결과는 경제활동과 사회를 지배하는 정치적, 사회적 제도인 일단의 규칙에 달려있다.
- ② 행정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행정 업무 수행에서 효율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 ③ 정부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정부와 기업을 동일시함으로써 기업경영 원리와 기법을 그대로 정부에 이식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다.
- ④ 정부 주도의 공공서비스 전달 또는 공공문제 해결을 넘어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 ⑤ 과정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조직 내 관계보다 조직 간 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다.

- 해설** ① [×] 정치적, 사회적 제도인 일단의 규칙의 중요성을 강조한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 ② [×]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이다.
- ③ [○] 신공공관리론의 한계에 대한 설명이다.
- ④ [×]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이다.
- ⑤ [×] 신공공관리론은 조직 간 관계보다 조직 내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조직 간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은 뉴거버넌스론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147, 159, 166, 178

▶ ③

20 다음 중 광역행정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처리방식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광역적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 ② 연합방식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법인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합단체를 새로 창설하여 광역행정에 관한 사무를 그 연합단체가 처리하게 하는 방식이다.
- ③ 연합방식은 새로 창설된 연합단체가 기존 자치단체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스스로 사업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공동처리방식과 구별된다.
- ④ 통합방식은 일정한 광역권 안에 여러 자치단체를 포괄하는 단일의 정부를 설립하여 그 정부의 주도로 광역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 ⑤ 통합방식은 각 자치단체의 개별적 특수성을 반영함으로써 지방분권화를 촉진하고 주민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어 발전도상국보다 선진 민주국가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다.

- 해설** ① [○] 공동처리방식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광역적 행정사무를 함께 처리하는 방식으로 행정협의회, 일부사무조합 등이 활용된다.
- ② [○] 연합방식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그대로 가지면서, 그 전역에 걸친 단체를 새로 창설하여 광역행정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거기에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 ③ [○] 연합방식은 공동처리방식이 갖는 협력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기존 자치단체의 독자성을 존중하면서도 연합체 자체의 사업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안된 방식이다. 연합체가 스스로 사업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공동처리방식과 구별된다.
- ④ [○] 통합방식은 일정한 광역권 안에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포괄하는 단일의 정부를 설립하여 그 정부의 주도로 잡다한 광역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 ⑤ [×] 통합방식은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가장 크게 제약받는 방식이다. 따라서 선진국보다는 발전도상국(개도국)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지방자치론 p.864~867

▶ ⑤

21 다음 중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뉴거버넌스 정부개혁모형별 문제의 진단 기준과 해결 방안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통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전근대적인 권위에 있으며, 구조 개혁 방안으로 계층제를 제안한다.
- ② 탈내부규제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내부규제에 있으며, 관리 개혁 방안으로 관리 재량권 확대를 제안한다.
- ③ 시장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독점적 공급에 있으며, 구조 개혁 방안으로 분권화를 제안한다.
- ④ 참여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관료적 계층제에 있으며, 구조 개혁 방안으로 가상조직을 제안한다.
- ⑤ 신축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영속성에 있으며, 관리 개혁 방안으로 가변적 인사관리를 제안한다.

- 해설** ④ [×] 참여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계층제이며, 구조 개혁 방안으로 평면조직을 제안한다.

구 분	전통적 정부	시장적 정부	참여적 정부	신축적 정부	탈규제 정부
문제제기	전근대적 권위	독점	계층제	영속성	내부규제
구조개혁방안	계층제	분권화	평면조직	가상조직	특정 제안 없음
관리개혁방안	직업공무원제 절차적 통제	성과급 민 간 부 문 의 기법	총품질관리 팀제	가변적 인사 관리	관리재량권 확대
정책결정 개혁방안	정치·행정의 구분	내부시장 시장적 유인	협 의 협 상	실험	기업가적 정부
공익의 기준	안정성, 평등	저비용	참 여 협 의	저비용 조 정	창의성 활동주의

참고 compass 행정학 총론 p.168

▶ ④

22 다음 중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여 재산공개 의무가 있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②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 ③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④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 ⑤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해설 ① [×] 소방정감(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재산공개 의무가 있는 공직자에 해당한다.
②, ③, ④, ⑤ [○]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등은 재산공개 의무가 있는 공직자에 해당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인사행정론 p.559

▶ ①

23 다음 중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와 기관장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5월 10일까지 위 법에 따라 확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등을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결산서 등에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8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다음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매년 9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해설** ①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경영실적 보고서)와 기관장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 ② [○]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5월 10일까지 이 법에 따라 확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결산서 등)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43조 제3항).
- ③ [○]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39조의 2 제1항).
- ④ [○] 기획재정부장관은 결산서 등에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8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43조 제6항).
- ⑤ [×] 기관장은 사업내용과 경영환경,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매년 **10월 31일(9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46조 제1항).

참고 compass 행정학 조직론 p.364~366

▶ ⑤

24 다음 중 연구조사방법론에서 사용하는 타당성(Validit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준타당성(criterion-related validity)은 하나의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비교했을 때 도출된 연관성의 정도이다.
- ② 구성타당성(construct validity)은 연구에서 이용된 이론적 구성개념과 이를 측정하는 측정 수단 간에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 ③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은 측정도구를 구성하는 측정지표간의 일관성이다.
- ④ 수렴적 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은 동일한 개념을 다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측정된 값 간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 ⑤ 차별적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은 서로 다른 이론적 구성개념을 나타내는 측정지표 간의 관계를 의미하며, 서로 다른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지표 간의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차별적 타당성이 높다.

해설 ③ [×] 내용타당성은 처치와 결과 사이의 관찰된 관계로부터 도달하게 된 인과적 결론의 적합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측정도구를 구성하는 측정지표간의 일관성은 신뢰도이다. 즉, 신뢰도는 측정도구가 어떤 현상을 되풀이해서 측정했을 때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지의 정도에 관한 것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정책론 p.288

▶ ③

25 다음 중 정책결정과 관련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쿠바 미사일 사태에 대한 사례 분석인 엘리슨(Allison)모형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은 합리모형보다는 조직과정모형과 정치모형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 ② 드로(Dror)가 주장한 최적모형은 기존의 합리적 결정 방식이 지나치게 수리적 완벽성을 추구해 현실성을 잃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분석뿐만 아니라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 ③ 쓰레기통모형은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네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될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 ④ 에치오니(Etzioni)의 혼합탐사모형에 의하면 결정은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합리적 의사결정모형과 점진적 의사결정모형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⑤ 사이먼(Simon)의 만족모형에 의하면 정책담당자들은 경제인과 달리 최선의 합리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시간과 공간, 재정적 측면에서의 여러 요인을 고려해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해설 ① [×] 엘리슨 모형은 1960년대 초 쿠바가 소련의 미사일을 도입하려고 했을 때 미사일이 운반되지 못하도록 미국이 해상봉쇄라는 대안을 채택한 사건 당시 의사결정과정을 세 가지 모형(합리모형, 조직과정모형, 정치모형)을 통해 설명한 것이다. 엘리슨은 실제 정책결정에서는 어느 한 모형이 아니라 세 가지 모형이 모두 적용될 수도 있음을 강조하였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정책론 p.256

▶①